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7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회의보고 | 2

활동보고 | 6

활동자료 | 22

정책자료 | 56

선전자료 | 96

연금행동 2017년

1차 집행위원회 회의

1월 12일(목) 오전 11시
공무원노조 7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국민연금지부(최경진 위원장, 황길상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6개 단체 10명 참석

논의

1. 2016년 결산보고
2.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기타

연금행동 2017년

대표자 회의

2월 9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국장),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공공운수(조상수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 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최경진 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노년유니온(김선태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8개 단체 15명 참석

논의

1.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기타

연금행동 2017년

2차 집행위원회 회의

3월 15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공공운수노조(변희영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황길상 수석부위원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총 6개 단체 10명 참석.

연금행동 2017년

3차 집행위원회 회의

5월 3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논의

1. 19대 대선 사업계획 관련
 - 대선 정책협약 요구안 및 대선후보 공개 정책질의서
2. 기타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간사), 참여연대(김남희팀장, 조준희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황길상 수석부위원장, 박종필 정책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총 8개 단체 13명 참석

논의

1. 6~7월 사업계획 관련
2. 기타

연금행동 2017년

4차 집행위원회 회의

9월 21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차장), 참여연대(조준희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4개 단체 7명 참석

논의

1. 재정추계 대응 관련
2. 하반기 사업계획 관련
3. 기타

연금행동 2017년

5차 집행위원회 회의

11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차장), 참여연대(조준희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재현 국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6개 단체 9명 참석

논의

1. 하반기 사업 진행 관련
2. 기금운용체계 개편 대응 관련
3. 기타

연금행동 2017년

6차 집행위원회 회의

12월 27일(수) 오후 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차장), 참여연대(김남희팀장, 조준희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시연 운영위원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황길상 수석부위원장, 오종현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7개 단체 11명 참석

논의

1. 하반기 사업 진행 마무리 관련
2. 기금운용체계 개편 대응 관련
3. 4차 재정추계 진행 경과 관련
4. 2018년 연금행동 사업 계획 관련
5. 기타

집행위-정책위 간담회

1월 4일(수) 오후 1시
민주노총 교육원

주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입법발의 논의

참석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정책위(주은선 교수, 이찬진 변호사, 원종현 박사), 사무국장

연금행동-SEIU 간담회

1월 4일(수) 오후 3시
민주노총 교육원

논의내용

맥도날드가 아시아 지역에 매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음. 맥도날드가 저임금, 안전, 탈세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향후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김옥동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사무국장

〈전미서비스노조〉 Michael Zucker(Director Retail Initiatives), Nick Rudikoff(Global Affairs Corrdinator)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1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정문주 정책본부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

장), 노년유니온(김선태 위원장, 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국민연금지부(최경진 위원장, 황길상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호일 수석부위원장, 손병학 선전담당), 사무국장 등

주최

연금행동, 권미혁의원



논평발표

1월 17일

내용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 발표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공문 발송

2월 16일

내용

국민연금공단 상임 및 비상임이사, 변협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에게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공문 발송

논평발표

2월 17일

내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관련 논평 발표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내용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김옥동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정문주 정책본부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공공운수노조(조성덕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위원장 및 수도권지회 간부, 사무국장 등



신문광고

연금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신문광고: 경향·한국 1면, 한겨레 2면.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입니다!!”

논평 발표

3월 2일

내용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 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국민연금 찬성 관련 논평 발표

연금행동_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 공대위 간담회

3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4층 회의실

참석

〈연금행동〉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공공운수노조(최보희 부위원장, 한대식 정책국장), 박대진 의료연대 돌봄지부 조직국장,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 노조 교육선전부장

결과

국민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관련 활동 공유. 3/21(화)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 진행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토론회

3월 22일(수) 오전 9시
페럼타워 페럼홀

주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주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후원

경향신문사, 매일노동뉴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촉구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내용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조준희 간사), 노년유니온(김선태위원장, 고현종 사무처장 등),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배경민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공공운수노조(최보희 부위원장,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한대식국장), 집걱정없는세상(차선화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유지현위원장), 국민연금지부 황길상 수석위원장, 박내선, 박정호, 공민규 부위원장 및 수도권지회 간부,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공동 기자회견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공동 기자회견,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주최

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논평 발표

4월 13일

내용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연금 공공투자 발언 관련 논평 발표

성명 발표

4월 28일

내용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상정 무산 관련 성명 발표

이슈페이퍼 발표

5월 2일

내용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 19대 대통령 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이슈페이퍼 발표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내용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조준희 간사),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공공운수노조(최준식 부위원장, 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최경진 위원장 및 수도권지회 간부), 사무국장 등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인수 위 정책제안서 전달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제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참석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정광호 사무처장, 유정엽 정책실장, 김정목 정책간사),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조준희 간사), 노년유니온(김병국 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공공운수노조(김애란 사무처장, 정진화 국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최경진 위원장, 손호종 정책실장, 지진표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논평 발표

6월 8일

내용

“삼성 합병 ‘외압’ 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 문형표, 홍완선 법원 판결 관련 논평 발표

국민연금기금 가입자위원포럼 간담회

6월 16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 기금운용 자산배분 및 성과평가 과정 개요”
2.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바람직한 국민연금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이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참석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기금실행위원), 전창환 교수(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간사), 국민연금 지부(박종필 정책위원장),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조준희 간사), 이재훈 전문위원, 사무국장 등



2017년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6월 22일(목) ~ 23일(금)

10시 ~ 17시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강의

○ 22일

[제1강]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인가? <정해식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유희원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제3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 <권혁진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제4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I <이재훈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 23일

[제5강] 세대간 형평성 다시보기 <이은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제6강]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제7강]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주은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종합토론]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7월 14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권미혁 의원실

사회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설정”, 정해식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김연명 전 국정기획위 사회 분과위원장_집행위 간담회

8월 2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주제

문재인 정부 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 관련 국정과제 방향

참석

김연명 전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집행위원장,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조준희간사),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김시연),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황길상 수석 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사무국장 등

사무국 워크숍

8월 10일(목)~11일(금)
인천 석모도 해비치 펜션

내용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등

청년 집담회 ‘어쩌다 노인’

9월 1일(금) 오후 7시
홍대 카페 허그인

행사

1부 청년 집담회(나의 노후를 생각해보는 시간)
2부 전문가 대담(이은주 박사, 유희원 박사)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기금체계개편 관련 복지부 간담회

9월 18일(월)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10층
회의실

참석

복지부_최경일 연금재정과장, 김정연 서기관/ 연금행동_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김육동 부위원장, 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차
장), 참여연대(조준희 간사), 국민연금지부(박종필 정책위원장), 이재
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내용

기금체계개편 방향 초안 설명 등

논평 발표

11월 7일

내용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논평 발표

기금체계 개편 관련 연금행동-복지부 협의

11월 21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참석

[복지부] 최경일 연금재정과장/ [연금행동]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
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내용

복지부 개편안 변경 내용 확인 및 연금행동 기본입장 설명

연금행동 대표단-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11월 27일(월) 오후 7시
강남사옥 10층 중회의실

참석

김성주 이사장/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참여연대(김
남희 팀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논의

상견례 및 연금개혁 관련 공단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공단 내 관련
노사 공동TF 설치 등

국민연금기금 가입자위원

포럼 간담회

11월 28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 김연명 교수(중앙대), 이찬진 변호사, 정세은 교수(충남대),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차장), 참여연대(김남희팀장, 조준희 간사),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등

논의

기금체계 개편 대응 관련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12월 28일(목) 오후 2시

중앙대 대학원 301호

좌장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발표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와 부채[신성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이지인(경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국민연금 가입간의 정합성 검토[주수정(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영세 자영업자 근로이력과 국민연금 진입에 관한 연구[이민아(연세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한기명(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불안정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다양성[김윤영(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후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2017.1.12.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6.1.17.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 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2.16.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공문



수 신 국민연금공단 상임 및 비상임 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담당: 구창우 사무국장 010-8747-1275, pension1045@gmail.com)

제 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의 건**

문서번호 연금행동-02호(2017.2.16.)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 가치를 걸고 306개 노동시 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기구로,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 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 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기초연금의 진짜 연금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분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31 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5.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 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 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6.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7. 한편 국민연금공단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 상임 및 비상임 이사, 또 비상임 이사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경영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8.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상임 및 비상임 이사, 또 비상임 이사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 대표들께서 국민연금공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시고, 반드시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주소] 150-03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1-17번지 2층 / [전화] 070-4211-6578 / [전송] 02-423-6578 / [E-mail] pension1045@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pensionforall.kr>

2017.2.21.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검수사와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 비리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 처벌이다.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역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중인 셈이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현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특검의 수사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형사적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범죄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연루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인가. 국민들이 매달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 손해 역시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청원인을 모집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범죄혐의가 명확해진 이상 정부

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연금 손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삼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제도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손해에 대한 보전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7.2.21.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2017.2.21.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 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 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

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 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7.3.23.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2017.4.13.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연금 공공투자 발언 관련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7.4.28.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상정 무산 관련 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 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

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7.5.22.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문형표는 지난 2015년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특검에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문형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의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이며, 따라서 청산해야할 1호 인물이다. 국민노후를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여 팔아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문형표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문형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시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증언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압력행사가 드러났음에도 문형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두 달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물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순실과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에 은밀하고 부당하게 간섭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순직처리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문형표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사적 책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

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에 대한 입증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만의 하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정권과 재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중추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국민 노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적폐 1호’ 인 문형표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7.6.8. 문형표, 홍완선 법원 판결 관련 논평

삼성 합병 ‘외압’ 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 해야
- 앞으로 복지부 · 정치권 ·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게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게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2017.6.8.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 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

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7.11.7.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논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

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회신용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해소에 대한 정책질의서

※ 구체적인 입장이나 추가의견 제시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통한 답변 가능.

I. 기초연금 관련

1. 기초연금 급여 확대를 통한 노인빈곤 해소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2배(기존 국민연금 A값5%→ 10%, 당시 기준 약 2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하위 70%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물가연동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49.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기초연금액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기초연금 급여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100%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대비 최소 15%(약 30만원)로 상향	
	국민연금과 연계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기초연금 감액/ 최대 절반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과 연동)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	
추가 의견			

2. 기초연금 자원 및 대상

-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률은 법적기준보다 낮은 65.9%에 불과해 약 2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역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자노인에게는 과세를 통한 환수시스템 적용).
- 또한 기초연금 자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재정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기존 복지서비스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기초연금 대상 자원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 (사각지대해소 및 행정비용 감소)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 (최소 10% ~ 최대 60% 분담)	전액 국고 지급	
추가 의견			

II. 국민연금 제도

3.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라는 공포로 불신을 부추겨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 상당수의 국민들이 노후가 됐을 때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이, 국가가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없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명문화)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	

4. 국민연금 급여적절성 보장

- 2017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5.5%로(40년 가입기준),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조차 실제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은 20%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200만원 소득의 가입자가 20년을 가입해도 430,560원에 불과해, 2017년 1인 기준 생계급여(495,879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명목 및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급여	소득대체율 45.5% (2028년 40%까지 삭감)	2018년 45%에서 급여삭감 중단 사회적 논의 통해 50% 상향	
	2017년 449만원 (공무원연금 785만원)	소득상한선 상향(현실화) 및 급여상한선 신설	
추가의견			

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여전히 저임금·비정규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그리고 중소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고려하면 약 568만 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별도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오히려 배제되어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기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사업장기준 개선, 지역가입자 신규지원, 건강보험 포함 등)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	‘육아 크레딧’ 으로 확대 청년을 위한 크레딧 신설	
추가의견			

Ⅲ. 국민연금 기금

6.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별도 공사화 설립 여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나 제도로부터 분리해 별도 공사를 신설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별도 공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이 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분	기존 일부 주장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설립	별도 공사화 반대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이 박근혜-최순실-삼성 간 불법 비리게이트에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권력과 재벌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 이에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자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연금행동 요구	세부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가입자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정부의 영향력 축소 (정부추천 축소 및 국회추천 신설 등)	
	공개적이고 독립적 운영 보장	회의 정례화, 공개화, 가입자 대표위원의 안건발의권 및 자료 요청권 등 권한 부여 등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전환 및 법적기구화	
추가 의견			

8.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 국민연금기금은 545조의 거대 규모의 기금이 적립돼 있으며(2016년 11월말 기준), 향후 2035년 GDP의 절반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재무적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용해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현행 수익률 지상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기금의 안정성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수익성,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추구하는 것으로 운용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따라 운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금융부문 재무적 수익 중심의 투자운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보육, 요양, 병원 등)	
	‘책임투자’ 로만 규정, 선택적으로 반영해 위탁운용	‘사회책임투자’ 법으로 명문화 및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평가·모니터링체계 마련	
추가 의견			

IV. 기타

9. 공무원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연금법(제 69조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 충당금 이외, 추가적인 책임적립금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 및 급여지급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공무원 연금	책임준비금 법규정이 있으나, 실제 미적립하고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연금재정안정	

10.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 한국에서의 연금개혁은 당사자 참여를 배제하고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빈곤 해소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구분	기존	연금행동 요구	찬성/반대
사회적 기구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	노후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추가 의견			

답변리스트 (정리용)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윤석열
기초연금 급여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100%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대비 최소 15%(약 30만원)로 상향				
	국민연금과 연계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기초연금 감액/ 최대 절반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과 연동)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				
기초연금 대상 재원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 (사각지대해소 및 행정비용 감소)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 (최소 10% ~ 최대 60% 분담)	전액 국고 지급				
국민연금 지급보장	없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명문화)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소득대체율 45.5% (2028년 40%까지 삭감)	2018년 45%에서 급여삭감 중단 사회적 논의 통해 50% 상향				
	2017년 449만원 (공무원연금 785만원)	소득상한선 상향(현실화) 및 급여상한선 신설				
국민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가사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사업장기준 개선, 지역가입자 신규지원, 건강보험 포함 등)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청년을 위한 크레딧 신설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윤석열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설립	별도 공사화 반대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가입자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정부의 영향력 축소 (정부추천 축소 및 국회추천 신설 등)				
	공개적이고 독립적 운영 보장	회의 정례화, 공개화, 가입자 대표 위원의 안건발의권 및 자료 요청권 등 권한 부여 등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전환 및 법적기구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금융부문 재무적 수익 중심의 투자운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보육, 요양, 병원 등)				
	‘책임투자’ 로만 규정, 선택적으로 반영해 위탁운용	‘사회책임투자’ 법으로 명문화 및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평가·모니터링체계 마련				
공무원 연금	책임준비금 법규정이 있으나, 실제 미적립하고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연금재정안정				
사회적 기구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	노후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2017. 5. 2.

< 요약 >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음.
- 연금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이미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세대는 별다른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음. 즉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특히 2017~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역시 2018년에 이뤄지는 등 중요한 제도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 동원되면서 기금의 국민적 신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각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에 대한 공약 분석을 통해 후보들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평가했음.
- **심상정 1위, 문재인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92.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50점도 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음.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80	25	50	5	95
국민연금제도	82.9	0	34.3	48.6	91.4
국민연금기금	88	16.0	64.0	0	92.0
총점 (100점 만점 환산기준)	85.0	11.2	47.5	23.8	92.5

* 자세한 평가 결과는 본문 참고

- 각 분야별 점수에서도 심상정, 문재인 후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1. 들어가며

1)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연금정책의 의미와 중요성

○ 2017년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

- 한국 사회는 올해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임¹⁾. 그리고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10,018,519명), 2021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즉, 이번 19대 당선된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정에서 국정운영을 맡게 됨.

○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세대, 노후준비가 어려운 청년세대

-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3년 49.6%에서 2014년 48.8%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노인 빈곤의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함. 특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인해 별다른 지원과 대책이 없다면 노후준비가 어려운 세대들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함.
- 즉 한국사회는 현 세대의 노인빈곤 문제 뿐 아니라, 향후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 문제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법4조제2항), 2003년, 2008년에 이어 2013년에 이어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근거로 끊임없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시도해왔음.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추

1) UN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진했으며, 지난 3차 재정계산(2013년) 당시에도 2044년 수지적자, 2060년 기금소진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4차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 기존과 같이 ‘재정안정’만을 위해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대상범위의 포괄성(사각지대 해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개악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지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임.
- 또한 2018년은 5년마다 시행기로 한 기초연금 적절성 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해이기도 함(법제9조). 박근혜 체제가 남긴 유산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개선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 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동원된 국민연금기금의 신뢰회복

-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추악한 비리게이트에 동원됐음.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으며 ‘삼성 측은 8천 549억을 이익을 취한 반면, 국민연금은 1천 388억 손해를 봤다’고 수익-손해액을 적시해 수사결과를 발표함.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외압에서 벗어나 제도와 조율하며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구속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대신하는 신임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청렴하며 정권과 자본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이러한 적폐청산 과제 역시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

2) 평가 대상 및 내용

(1)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 대상은 19대 대통령 선거후보의 연금 정책 관련 공약으로 함. 현재(4.27)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돼 있으나, 전국 평균지지율이 2% 이상인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총 5인의 대통령 후보(이하 기호 순)를 중심으로 평가함.
- 각 후보의 연금정책은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및 정책자료, 그리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의 ‘정책질의서’에 답변에 기초하여 분석함. 연금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해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최신 순) 만 회신이 왔으나(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안희정 후보 포함),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음.

(2) 평가 기준과 내용

- 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은 ILO의 ‘사회적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202호, 2012)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전략에 근거해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함.
- 특히 이러한 방향 하에서 ILO가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한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 급여와 기여 간 보험수리적 집단적 형평성, ④ 건전한 재원, ⑤ 관리운용의 국가책임과 함께 ⑥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함.

[표-18]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기준	내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 수급 대상범위 확대	○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적용범위 확대(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 등)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 급여 상향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 연동방식 변경(물가→소득)	○ 급여(소득대체율) 상향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개선
③급여와 기여 간 집단적 형평성	-	○ 중장기적 재정목표(급여 및 보험료 계획 등)
④건전한 재원	○ 중앙정부의 전액 국고지원 및 재원조달 계획	○ 기금운용의 민주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여부 ○ 국가의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여부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여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등
⑥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	○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2018) 및 개선 방안 논의	○ 4차 재정계산(2017~2018) 및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관련 주요한 사회적 혹은 후보 간 첨예한 쟁점 사안인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여부 ②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대상자 하위 50% vs 하위 70% ③ 국민연금기금운용 신뢰회복 및 공공투자 ④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제별 집중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2. 각 후보자별 연금정책 공약

-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집에 있는 연금 관련 내용을 그대로 재정리한 것임.

1)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표-19] 문재인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 연금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지급 → 30만원 균등지급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 인상 시 연평균 4.4조 추가소요)	‘18년 예산안 편성반영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대비의 실질적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확충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 가입자,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여 인상마련 방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추진 ○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17년부터 정책검토 후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 연금 (기금)	○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시설 매입 및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 유도. ○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모범기준(스튜어드십 코드) -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방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행사 대상에서 제외) - 주주권 행사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정보공개 - 환경 및 소비자 권익보호, 근로자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기타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영세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A값의 15%). 부가급여를 자애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0.42조)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2) 홍준표(자유한국당)

- 홍준표 후보는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의결권 행사 이외 다른 연금정책 관련 공약은 없음.

[표-20] 홍준표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 연금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 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현행과 동일) 어르신 10만원 인상	
국민 연금	○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개편해 법적기구화 -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 및 내용공개 의무화	

* 자유한국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3) 안철수(국민의당)

[표-21] 안철수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 연금	○ 기초연금 확대로 노인빈곤 개선 -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증액(소득하위 50%, 30만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 노후소득보장 계산제도’ 도입 ○ 기초연금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의 국비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부실행방안 마련 및 법 개정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직장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연금액 상향조정 - 임의 가입자 소득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제도 적용확대, 유족연금확대, 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 연금보험료 배우자 세금 공제	
국민 연금 (기금)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개편 - 주주권행사 지침 사전공시, 행사여부 사후공시로 투명성 확보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민연금법, 상법 등 개정
기타	○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 개인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의 통합가상관리계좌 도입 ○ 장애인연금 확대(기초급여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확대,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으로 통합)	실행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법 개정

* 국민의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4) 유승민(바른정당)

[표-22] 유승민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 기존 소득하위 70% 대상 지급은 그대로 유지.	임기 첫 해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18년도 예산 반영 (불필요한 재정지출절감 및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마련)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생계급여 < 최저연금액 < 최저임금). 국민연금 상한선 점차 확대해 재원 마련.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국고지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국민연금 (기금)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부가급여도 최대 12만원까지 인상	

* 바른정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5) 심상정(정의당)

- 심상정 후보는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을 모토로,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통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함.

[표-23] 심상정 후보의 주요 연금정책 공약

구분	공약 내용	비고
기초연금	○ 100%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국민연금 A값 연계 - 캐나다의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군대·실업크레딧 확대,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국가지급 의무 법에 명시 ○ '두루누리사회보험 2' 신설 :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2>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 대상(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4~60%지원)
국민연금 (기금)	○ 국민연금기금의 적절한 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장기요양시설 등에 사회 공공투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연평균 8조
기타		

* 정의당 제19대 대선 공약 자료집 등에서 재정리

3. 후보자간 공약 비교(1) ○ (적극 동의/공약 있음), △ (취지나 일부 동의/ 일부 공약), × (반대 또는 없음)

구분	현행	연금행동 요구	문재인	홍준표
기초연금 급여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100%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대비 최소 15%(약 30만원)로 상향	○ (하위 70%)	○ (하위 70%)
	국민연금과 연계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기초연금 감액/ 20년 가입은 절반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	×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과 연동)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	○	×
기초연금 대상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 (사각지대해소 및 행정비용 감소)	△ (신중검토)	×
국고부담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 (최소 10% ~ 최대 60% 분담)	전액 국고 지급	△ (취지찬성)	×
국민연금 지급보장	없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명문화)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	○	×
국민연금 급여	2017년 소득대체율 45.5% (2028년 40%까지 삭감)	2018년 45%에서 급여삭감 중단 사회적 논의 통해 50% 상향	○	×
	2017년 434만원 (공무원연금 805만원)	소득상한선 상향(현실화) 및 급여상한선 신설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가사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 (취지찬성/ 단계적 추진)	×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사업장기준 개선, 지역가입자 신규지원, 건강보험 포함 등)	○	×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청년을 위한 크레딧 신설	○	×

3. 후보자간 공약 비교(2) ○ (적극 동의/공약 있음), △ (취지나 일부 동의/ 일부 공약), × (반대 또는

구분	현행 또는 일부 주장	연금행동 요구	문재인	홍준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설립(일부 주장)	별도 공사화 반대	○	×
	정부의 높은 영향력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정부추천 축소 및 국회추천 신설 등)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공개적이고 독립적 운영 보장 (정례화, 공개화, 안전발의권 및 자료 요청권 등 권한 부여)	○	×
	의결권만 행사(주주권행사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전환 및 법적기구화)	○	△
국민연금 기금운용	금융부문 재무적 수익 중심의 투자운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보육, 요양, 병원 등)	○	×
	‘책임투자’ 로만 규정, 선택적으로 반영해 위탁운용	‘사회책임투자’ 법으로 명문화 및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평가·모니터링체계 마련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공무원 연금	책임준비금 법 규정이 있으나, 실제 미 적립하고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연금재정안정	△ (취지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사회적 기구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	노후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2018년)	○	×

4. 주요 쟁점별 분석

-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자료 외 연금행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포함해 분석함.

1) 모든 후보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그러나 같지만 다른 약속.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 폐지	○	×	○	×	○
	물가 연동 → 소득 연동	○	×	×	×	○
기초연금 인상	20만원 → 30만원	○	○	○	○	○
	인상 대상	70%	70%	50%	50%	100%

- * 문재인 후보의 경우, 물가연동을 소득연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약에는 없고, 질의서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에 근거함.

(1) 박근혜의 유산, 기초연금 독소조항은 그대로 방치?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두 가지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었음.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것임(최대 10만원). 둘째,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하던 방식을 물가연동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가치를 하락시킨 것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가 물가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2017년 기초연금은 기존 소득연동 방식 때보다 11,600원 덜 받게 됐음. 더욱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점이며,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음.

-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 독소조항 폐지 약속(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만 폐지).
-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함.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을 받는 수급자는 2014년 약 16만 명에서 2016년 약 23만 명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더불어 감액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임.
- 물가연동 문제 역시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 즉 제대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음. 두 후보 간에도 인상시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 문재인 후보는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느림보 인상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25]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방식과 소득연동 방식 비교(금액 차이, 단위 : 원)

구분	현행 물가연동(a)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연동(b)	차이(a-b)
2014년	200,000원	200,000원	-
2015년	202,600원	204,480원	-1,880원
2016년	204,010원	210,550원	-6,540원
2017년	206,050원	217,650원	-11,600원

* 단독가구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준.

(2) 기초연금 30만원은 하위 50%에게만?

- 기초연금의 또 다른 쟁점은 각 후보마다 30만원 지급하는 대상범위가 다르다는 것임.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에게만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반면,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현행 70% 지급대상에 게 모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임.

○ 소득하위 50%(안철수, 유승민) VS 소득하위 70%(문재인, 홍준표) VS 전체 노인(심상정)

- 언뜻 보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30만원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소득상위 30% 부자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은 재원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소득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만 30만원 주겠다는 방안(10만원 인상)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소득하위 50~70% 구간에 속한 노인(현행 그대로 20만원 받게 되는 노인)이 기초연금 10만원을 덜 받아도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 전체 노인인구 698만 명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약 20%이며, 소득하위 50%미만에 해당되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임. 즉 소득하위 50%를 넘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히 선별적임. 49%와 51%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역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소득하위 70%(문재인, 홍준표) VS 전체 노인(심상정)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70%로 할지, 전체 노인(100%)으로 확대할 지는 50%와 70%처럼 민감한 쟁점은 아닐 수 있음. 그러나 법적으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 65.3%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16년 말 기준). 정부가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평가액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소득심사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할 뿐 아니라, 민원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처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클로백(부자노인에 대한 급여환수) 시스템

템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편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1) 국민연금 급여 상향 : 2007년 연금개혁에 대한 반성적 평가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민연금 급여상향	국민연금 급여상향	○	×	×	○	○
	소득상한선 상향	○	×	○	○	○
사회적 기구 구성		○	×	×	×	○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기초연금 뿐 아니라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문제를 제기하며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소득상한선 상향만 제시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아무런 공약도 없음.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2017년 현재 45.5%이며,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질 예정임. 제도 초기에는 소득대체율 70%에서 출발했으나, 1999년 60%로 10%p 낮췄고, 다시 2007년에 기존 60%를 2028년 40%까지 낮추는 급격한 급여삭감을 결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실제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낮은 20% 수준에 불과함. 2016년 국민연금 월 평균 연금액은 약 36만원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1인 기준 생계급여 49만 6천원보다도 낮은 수준임.
- 또한 2017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13만원 미만인 약 59%로(171만원 미만은 47.7%), 국민연금은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임. 빈곤예방을 넘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심상정·유승민 명확, 문재인 모호, 안철수 부족, 홍준표 없음.

- 먼저 심상정 후보는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명확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목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 방안 추진이나 사회적 합의 추진 등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지난 4월 19일 KBS방송토론회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국회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음.
- 보수후보인 유승민 후보조차,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연금이 아니”

라며 낮은 국민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저연금액을 보장해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공약함. 반면, 안철수 후보는 소득상한선 상향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공약 자체가 없음.

○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음.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삭감한 국민연금 급여를 다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하는데, 대체율 인상만 이야기할 뿐 보험료 인상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음(윤석명 2017. 4).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수리적인 관점으로 보험료 인상 공포를 부추기면서 급여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수준(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포괄성)를 목표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전망 하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채원 방안 계획(국고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하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지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해묵은 숙제임. 현재 10인 미만 저임금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나,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이 추진되고 있긴 하나,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또한 지니고 있음.
- 먼저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임금 사업장(사용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있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음.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음. 심상정 후보역시 지역가입자 지원하는 ‘두루누리2’를 신설하고 기존 두루누리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는 방안에도 찬성입장을 밝힘. 반면, 안철수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제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 연금보험료 세금공제만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승민 후보는 현행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취지에 찬성하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심상정 후보 역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음.
- 반면,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음.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회복 및 공공투자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민연금기금	신뢰회복 및 투명성 강화	○	△	○	×	○
	공공투자	○	×	△	×	○

(1) 기금운용의 신뢰회복 및 투명성 강화

- 지난 특검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불법동원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음. 정권과 재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현재 유명무실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전환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음. 다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음.
- 한편, 홍준표 의결권 행사 관련한 내용만 일부 포함돼 있을 뿐이며(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 법제화),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 현재 56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음. 일부에서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나 해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수익을 조금 높인다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것이 아님. 오히려 고위험 자산에 투자 확대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국민연금에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재정불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및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지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임.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공공보육, 공공임대, 공공요양,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기반을 늘림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 시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심상정 후보도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요양 시설 등 사회 공공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공약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청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 한편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 22일 토론회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도둑놈 징벌법을 만들어 아예 대못을 박아 놓겠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5. 총괄 평가

○ 채점기준

구분	기준	점수
A+	공약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는 경우	0.5
A	공약에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공약에는 없으나, 명확히 찬성 입장 밝힌 경우	0.4
B	공약에는 없으나, 취지 동의 및 긍정검토 밝힌 경우	0.3
C	공약에 일부 제한적인 내용만 반영한 경우	0.1
F	공약이나 입장이 없거나, 반대하는 경우	0.0

○ 채점결과 : 심상정 후보(92.5점) 1위, 문재인 후보(85.0점)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심상정 후보가 92.5점으로 1위, 문재인 후보가 85.0점으로 2위, 안철수 후보가 47.5점으로 3위, 유승민 후보가 23.8점으로 4위, 홍준표 후보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8.6점에 불과함.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 연금	국민연금 연계 폐지	A ⁺	F	A ⁺	F	A ⁺
	물가 연동 → 소득 연동	A	F	F	F	A ⁺
	20만원 → 30만원 (인상 대상)	A ⁺ (70%)	A ⁺ (70%)	C (50%)	C (50%)	A ⁺ (100%)
	전액 국고지원	B	F	A	F	A
소계(100점 만점 기준)		80	25	50	5	95
국민 연금 (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A	F	F	F	A ⁺
	국민연금 급여 상향	A	F	F	A ⁺	A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상향	B	F	A ⁺	A ⁺	A
	특수고용노동자 지역가입자 전환	B	F	F	F	A
	저임금·저소득 보험료 지원	A ⁺	F	B	A	A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A ⁺	F	A	B	A ⁺
	연금개혁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A ⁺	F	F	F	A
소계(100점 만점 기준)		82.9	0	34.3	48.6	91.4
국민 연금 (기금)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반대	A	F	F	F	A
	기금운용의 민주적 운영	A ⁺	F	A ⁺	F	A ⁺
	의결권행사 강화(주주권 확대 등)	A ⁺	A	A ⁺	F	A ⁺
	사회책임투자 강화 및 평가모니터링	B	F	B	F	A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A ⁺	F	B	F	A ⁺
소계(100점 만점 기준)		88	16.0	64.0	0	92.0
총점(8점 만점)		6.8	0.9	3.8	1.9	7.4
100점 만점 환산 기준		85.0	11.2	47.5	23.8	92.5

- 각 분야별(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평점으로 보더라도, 심상정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1위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2위를 차지함.
-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찾아보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

2017.6.8.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2017.6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응답자 63.6%가 아르바이트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 없어. 평균 23.8개월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가입기간은 3.6개월에 불과.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583명 가운데 63.6%(371명)가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 청년들은 평균 5회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평균 1회(0.7회)에도 못 미쳤다. 기간으로 따지면, 23.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노동을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다.
- 사업장 가입 시, 고용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50.78%로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입대상인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39.3%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연금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답변 또한 22.8%로 나타났다.
 - 특히, 보험료를 고용주가 절반 부담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50.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 실제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9%에 불과.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곳은 ‘언론’(36.5%), 지인(18.4%), SNS·인터넷(14.1%) 순. 학교교육(8.8%)이나 연금공단 홍보안내(7.9%)는 매우 낮음.
 - 실제 청년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 대부분의 연금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이 36.5%로 가장 많았고, 학교교육이나 연금공단 홍보·안내는 각각 8.8%, 7.9%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나 주관적인

평가위주의 정보들이다.

○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40.2%. 신뢰한다는 19.8%. 4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년은 40.2%이며, 이중 12.2%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보통이다”, 40.0%).
-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도 50.7%로 나타났다. 이밖에, “필요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서”는 30.3%,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어서”는 20.3%였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이며, 보장수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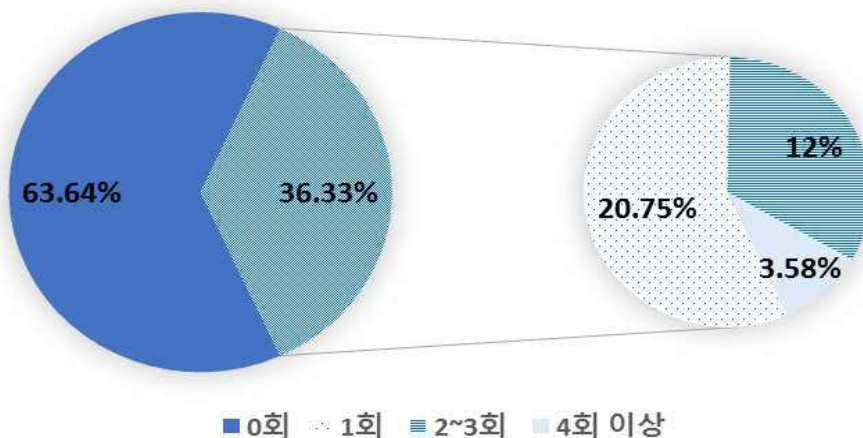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5점 척도, 매우 동의=5점)	평균
1) 국민 모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72
2) 노후에 적절한 노후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3.98
3)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은 앞으로 크게 늘어나야 한다.	4.11

[첨부] 한국 청년들의 노후 및 연금 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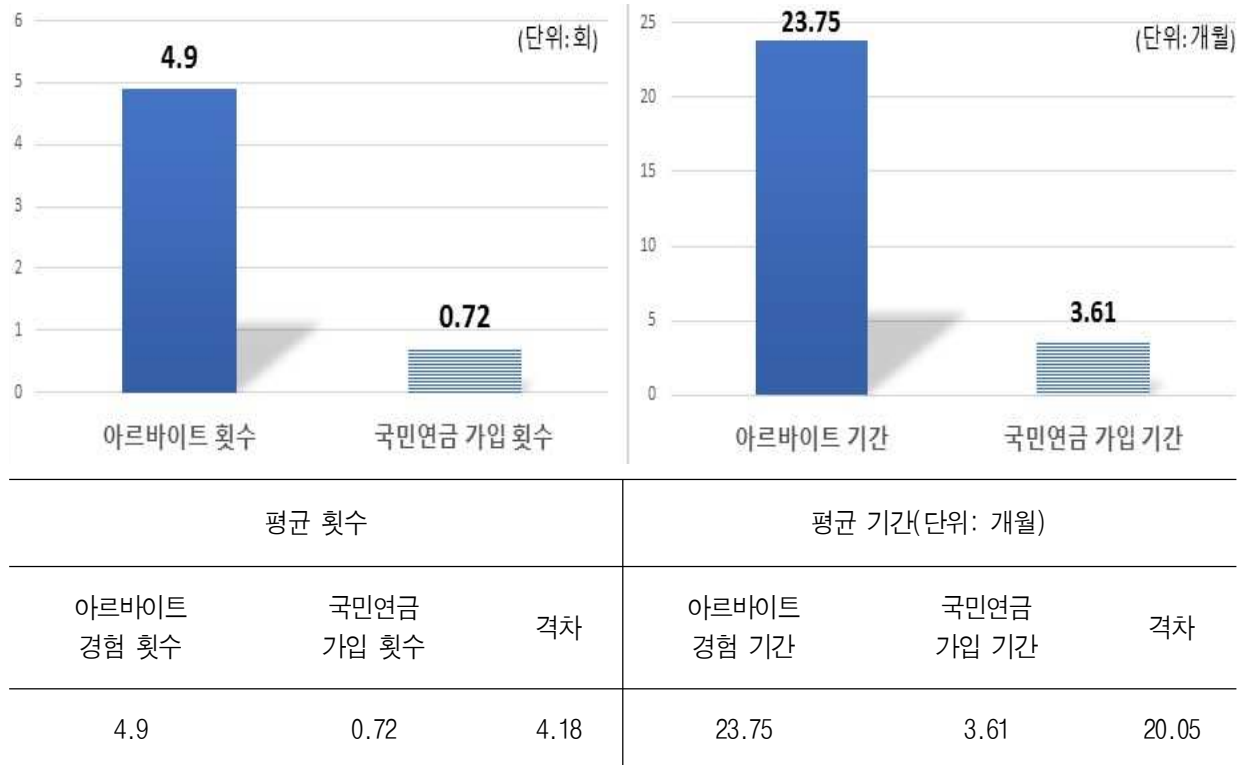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명)	비중(%)
성별	남	170	29.3
	여	410	70.7
	유효관측치(N)	580	100
거주지역	강원도	22	3.8
	경기도	170	29.3
	경상남도	8	1.4
	경상북도	8	1.4
	광주광역시	4	0.7
	대구광역시	18	3.1
	대전광역시	2	0.3
	부산광역시	22	3.8
	서울특별시	221	38.1
	세종특별자치시	1	0.2
	울산광역시	1	0.2
	인천광역시	40	6.9
	전라남도	6	1
	전라북도	22	3.8
	제주특별자치도	24	4.1
	충청남도	9	1.6
	충청북도	2	0.3
	유효관측치(N)	580	100
연령대	20대 초반	213	36.79
	20대 후반	257	44.39
	30대 초반	109	18.83
	유효관측치(N)	5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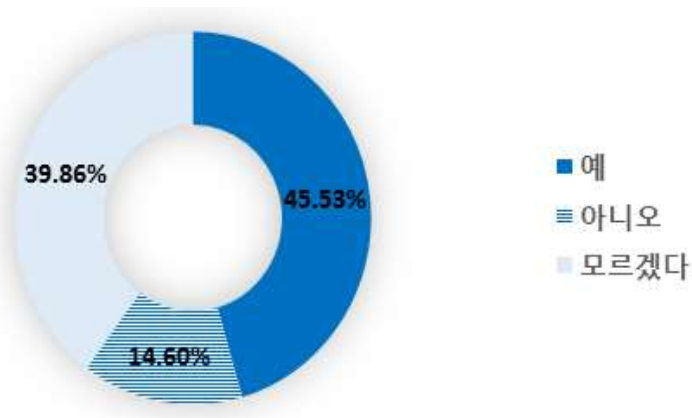
[그림] 아르바이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경험(N = 5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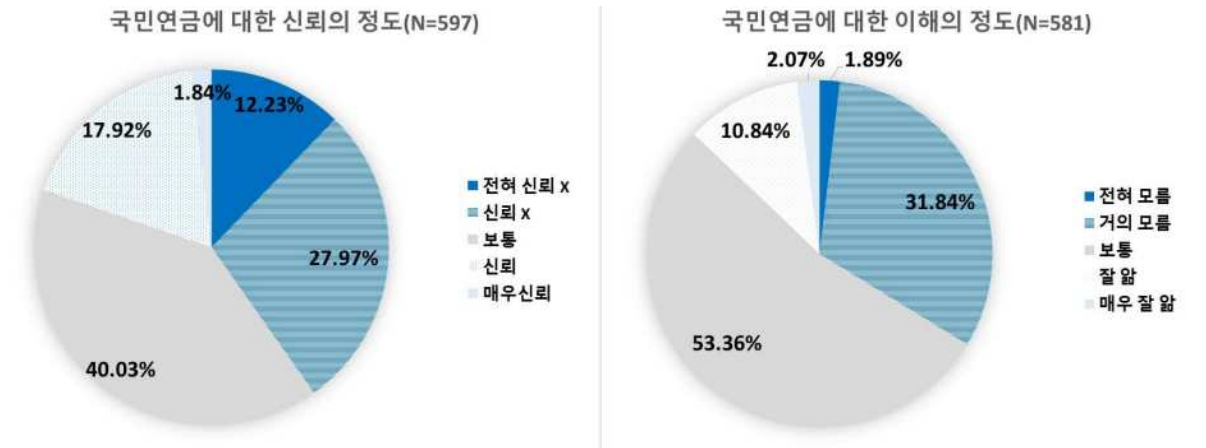
[그림] 아르바이트 기간 내 국민연금 미 가입 현황(단위 : 회, 개월)



[그림] 향후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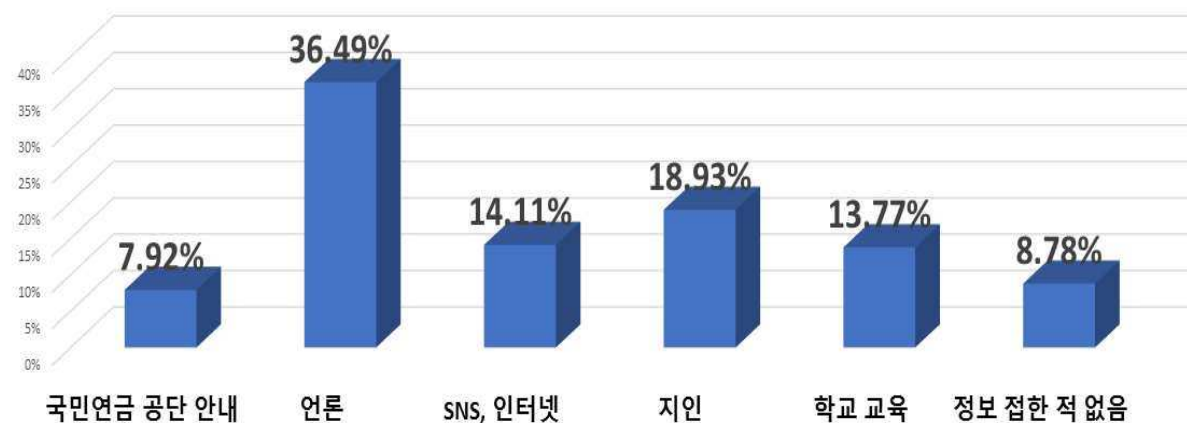
[그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N = 597명)



[그림] 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N = 579명)



[그림]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로(N = 581명)



'수감 50일' 넘는 문형표, 왜 쫓겨나지 않을까

'이사장직 유지' 뒤에 있는 비호 세력들... 황교안·복지부 등 해임 나서야

이재훈 정책위원

특검 1호 구속, 문형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50일이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27일간 공가(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휴가)와 연차를 쓰며, 천만원 가까운 월급까지 수령했다. 2월 1일부터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사업을 총괄하면서, 545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심의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까지 겸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문형표 피고인은 이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뿐더러,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그가 국민의 노후를 계속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기금을 검은 정경유착에 동원하고, 수천억의 손해까지 입혔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크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이사장직을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볼모로 삼고 있다. 이미 메르스 사태 때도 경험했지만 무책임의 극치일 뿐 아니라, 양심마저도 유죄다.

문형표를 비호하는 적폐세력

문형표 피고인이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고집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을 무시하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미 국민연금법(제36조)에는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가는 논란거리였는데, 이는 주로 임명에 대한 것이다. 심지어 황 권한대행은 탄핵정국에서도 이미 20여명의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더니, 정작 문형표 피고인의 해임 문제는 방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직무유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에는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무부처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다.

50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국회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철회했다.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문 이사장을 특별면담하며 공단 안팎의 여론을 전하고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형표 이사장이 사퇴를 표명하기 전에 해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해임권한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나 '국민연금공단 정관(제37조)'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연금공단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이사장과 공단 상임이사 3명, 그리고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전경련(이승철 부회장)과 경총, 복지부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와 복지부는 문형표 피고인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고, 상임이사들은 복지부 눈치만 보고 있다. 양대노총과 소비자단체 대표가 이사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열세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복지부 그리고 공단 이사회의 사용자단체들이 비호하는 것은 문형표 개인이 아니다. 그의 범죄행위가 곧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현재와 특검에 대한 박근혜 피의자의 공세적 대응에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적폐를 청

산할 권한을 지닌 이들이 이렇게 적폐행위를 하고 있으니, 문형표 피고인의 '이사장직 버티기'가 가능한 것이다.

문형표 즉각 해임하고, '문형표 방지법' 만들어야

지난 삼성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액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은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것이다. 2월 1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을 슬로건으로, '신뢰제고를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신뢰를 훼손시킨 공범이 버젓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를 진정성 있게 바라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번 일을 진정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잘못된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문형표 피고인을 연금공단 이사장에서 해임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연금공단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만연한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애초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부터 잘못됐다. 임원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 부당한 지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권력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시민에 의한 사회적 통제' 하에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이사회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경유착과 관변집회의 창구역할을 하며, 온갖 불법과 비리의 고리역할을 수행한 전경련은 이사회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대통령과 삼성의 사적연금"인양 인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으로 전락시킨 적폐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연론기고_19대 대선 연금공약 비교평가 기고<프레스시안 2017.5.3>

연금 공약, 1위 심상정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이재훈 정책위원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집을 살펴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니, 이제는 '좋은 말 대잔치' 같은 공약들이 눈에 띈다. '당위'는 넘치는데, '방법'은 초라하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연금 정책이다. 다른 중요하고 해묵은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은 '연금'이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인수위 시기부터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휘청거렸다. 취임 1주년 때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천명하더니, 당사자가 참여해 여야 간 합의까지 이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직접 개입해 좌초시켰다. 그러다 결국, 삼성과의 비리 게이트에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했다가 파면되고 구속됐다. 박근혜 체제가 연금제도에 남긴 낡은 유산을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개혁하려고 할까.

연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신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4%)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국정을 맡게 된다.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전히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장년 세대는 특별히 노후 준비할 겨를조차 없다. 노후 빈곤 해소와 노후 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선 직후인 6월부터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벌써 서서히 예열 중이다. 또한 2013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5년마다 진행기로 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도 눈앞에 두고 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잘 준비됐을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30만 원, 같지만 다른 약속

대선 후보 다섯 명 모두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초연금의 두 가지 독소조항 효과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덜 준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20만 원보다 덜 받는 대상자가 2014년 약 16만 명에서 2016년 23만 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면,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매년 오르는 것과 연동해 인상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물가 인상으로 변경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20만6050 원인데, 소득과 연동했다면 21만7650원이 됐을 것이다. 결국 매월 1만1600원이나 덜 받게 된 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10만 원 추가 인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만 적용된다. 언뜻 보면 가난한 노인에게 더 주자는 것이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119만 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미 충분히 선별적인 셈이다. 게다가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기 때문에 형평성까지 고려해 지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49%와 51%는 실질적으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제대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주는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는 셈이다. 두 후보 간에도 작은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느림보 인상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 사라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낮은 국민연금 급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들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

213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약 59%(171만 원 미만 47.7%)로,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하지만 2016년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약 36만 원으로, 생계급여 49만6000원보다 낮다(1인 기준).

심상정 후보는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현재 45.5%)을 50%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에 담았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조차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통해 단계적으로 8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2016년 총선에서, 국민연금 급여상향 의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목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방송토론 당시만 해도, 국회특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재원 방안에 대해 캐묻자, 움츠러든 모양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둑질", "보험료 폭탄"이라고 비난하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구치소에 있지만, 이런 논리와 주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 또한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한다"는 식의 단순 보험수리적 주장은 급여상향을 막으려는 공포마케팅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정공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담보해야 할 노후소득의 적정 보장 수준을 구체적이고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포함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재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닐까.

국민연금 급여 상향은 소위 '재정 안정화론'이나 '후세대 부담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치도 진전할 수 없다. 축소 일변도의 연금정책 기조를 바꾸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개혁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이 대선 후보의 연금 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가 1위(92.5점)이고, 문재인 후보가 2위(85점)로 나타났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47.5점), 유승민 후보(23.8점), 홍준표 후보(11.2점)는 낙제점을 받았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진보단체들로부터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다만 두 후보 간 순위를 결정지은 것은 구체성의 차이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소득상한선 상향,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명확한 입장 제시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 제도 분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 분야에서는 나름 선전했지만(64점), 나머지 기초연금(50점)과 국민연금 제도 분야(34.3점)에서 과락을 면치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을 받았다. 그나마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하는 공약으로 빵점 신세를 면했을 뿐이다.

이제 쇼트트랙 대선도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다시 5년간의 마라톤 질주를 하게 된다. 선거공약은 쇼트트랙이 아닌, 마라톤을 위한 나침반이다. 부디 앞서 달린 역대 선수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2017.2.21. 문형표 해임촉구 신문광고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입니다!!



구속된 지 52일,
문형표가 아직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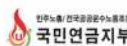
- ✓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징식으로 구속기소
- ✓ 국민연금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사유에 해당. 하지만, 문형표는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 거부

문형표는
즉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 ✓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당장 이사장 해임 건의 요청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형표 이사장을 즉시 해임 조치해야 합니다.
- ✓ 법원은 국민노후자금에 손해를 입힌 문형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이 땀흘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Public Pension for All

2017.6.22.~23.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웹자보



연금행동 연금학교 2017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6.22(목) - 6.23(금) 10:00 ~ 17:00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교육일정

1일차 6/22 (목)	10:00-10:20	<인사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10:20-11:40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0-14:20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14:20-15:40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40-17:00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I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2일차 6/23 (금)	10:20-11:40	세대 간 형평성 다시보기	이은주(민주연구원)
	13:00-14:20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14:20-15:40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주은선(경기대학교)
	15:40-17:00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

문의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010-8747-1275, pension1045@gmail.com)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2017.7.14.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 사 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1**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Public Pension for All

2017.9.1. 청년집담회 웹자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YOLO 라이프를 즐기는 우리.
어쩌다 노인이 된다면?

YOLO 하다 GOLO 간다?

어쩌다 노인

노후 그리고 연금

1부



청년집담회

나의 노후를 생각해보는 시간

2부



전문가대담

이은주 박사 연금행동 정책위원
유희원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9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홍대 카페 허그인

문의 010-7119-8510 문유진

신청 <https://goo.gl/forms/ORvH305juruQES2i1>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2017. 12. 28(목) 오후 2시 · 중앙대 대학원 301호

인사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좌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세션1 기초연금

[발표]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와 부채

:: 신성희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발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 이지인 (경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2 국민연금

[발표]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간의 정합성 검토

:: 주수정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발표] 영세 자영업자 근로이력과 국민연금 진입에 관한 연구

:: 이민아 (연세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한기영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발표] 불안정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다양성

:: 김윤영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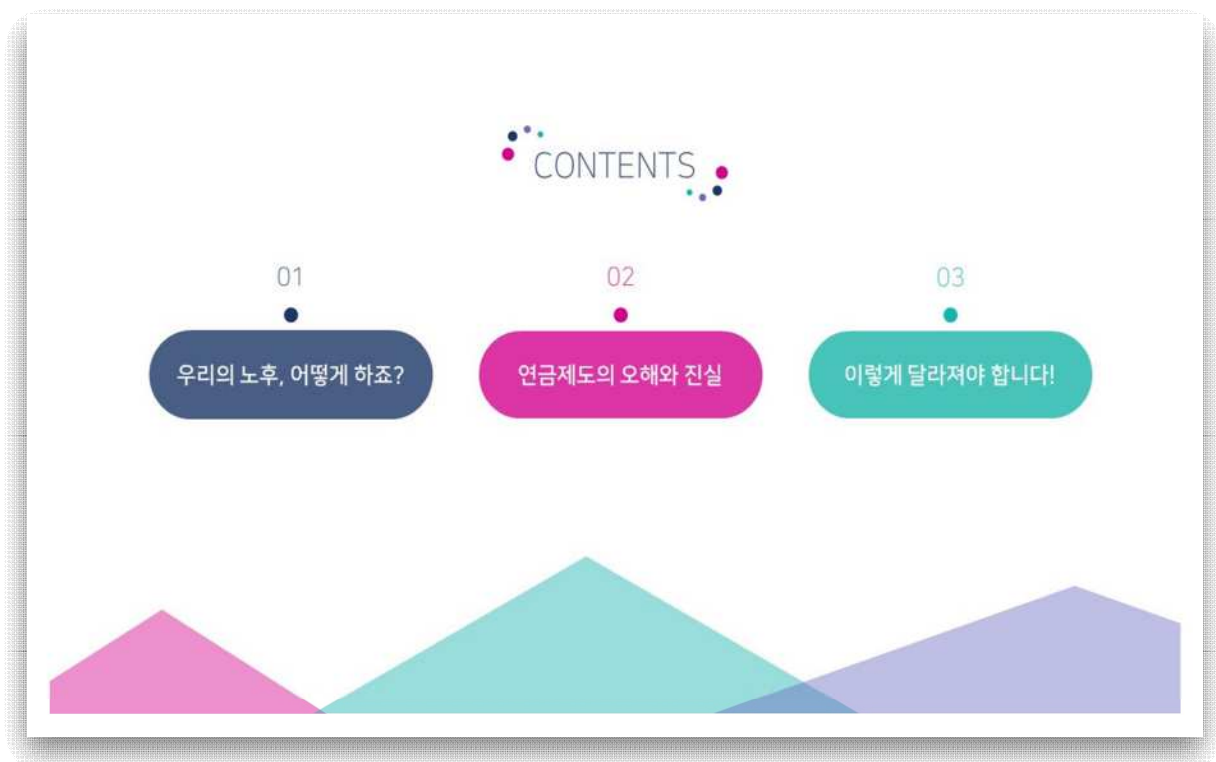
[토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슬라이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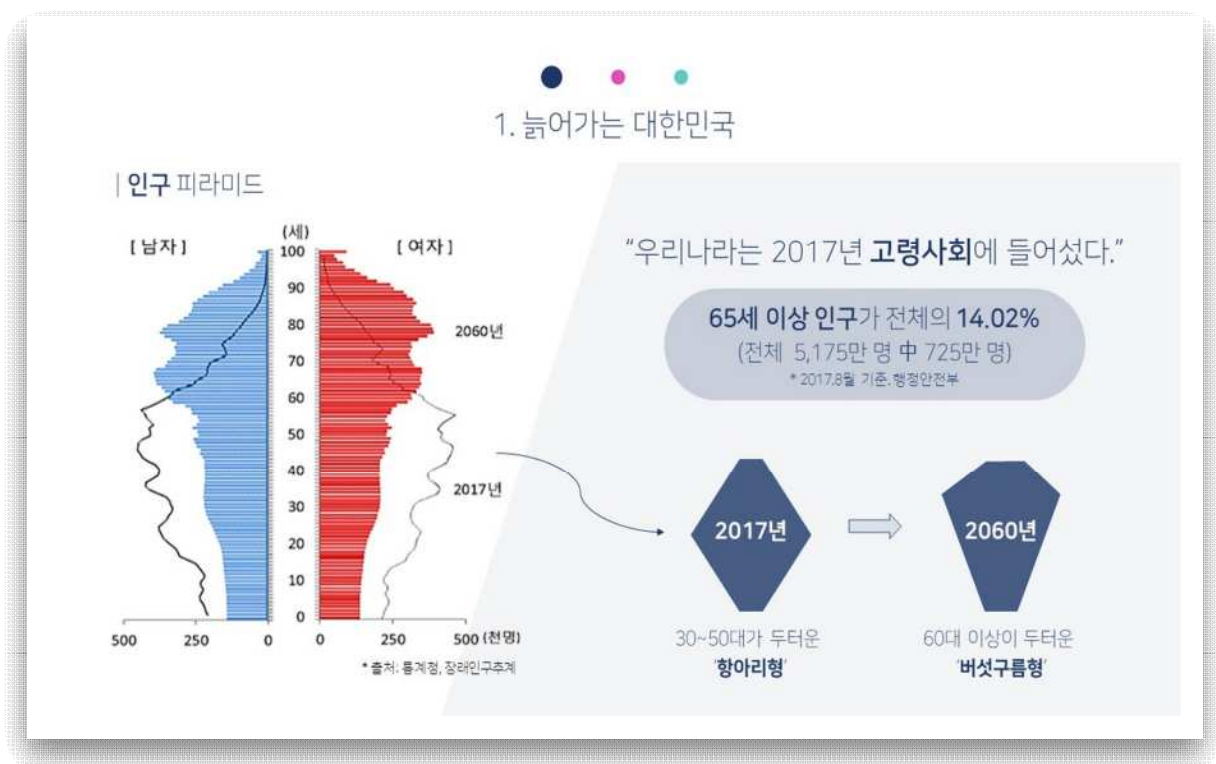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1. 늘어가는 대한민국



[슬라이드 6]

1. 늘어가는 대한민국



[슬라이드 7]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출처: [뉴스 인사이드-현장] 길 위로 내몰린 노년-노인 빈곤(2016.06.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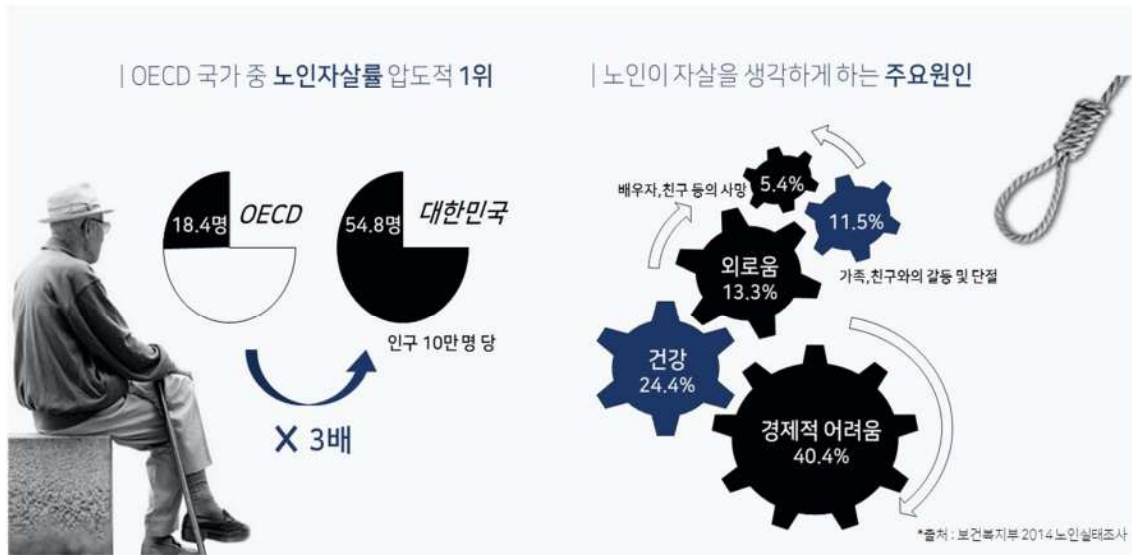
[슬라이드 8]

3. 대한민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슬라이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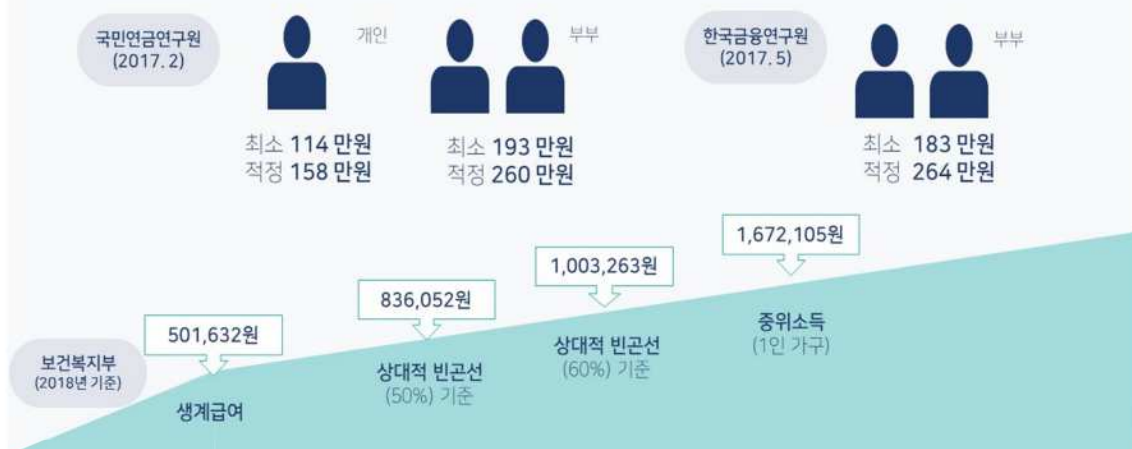
3. 대한민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슬라이드 10]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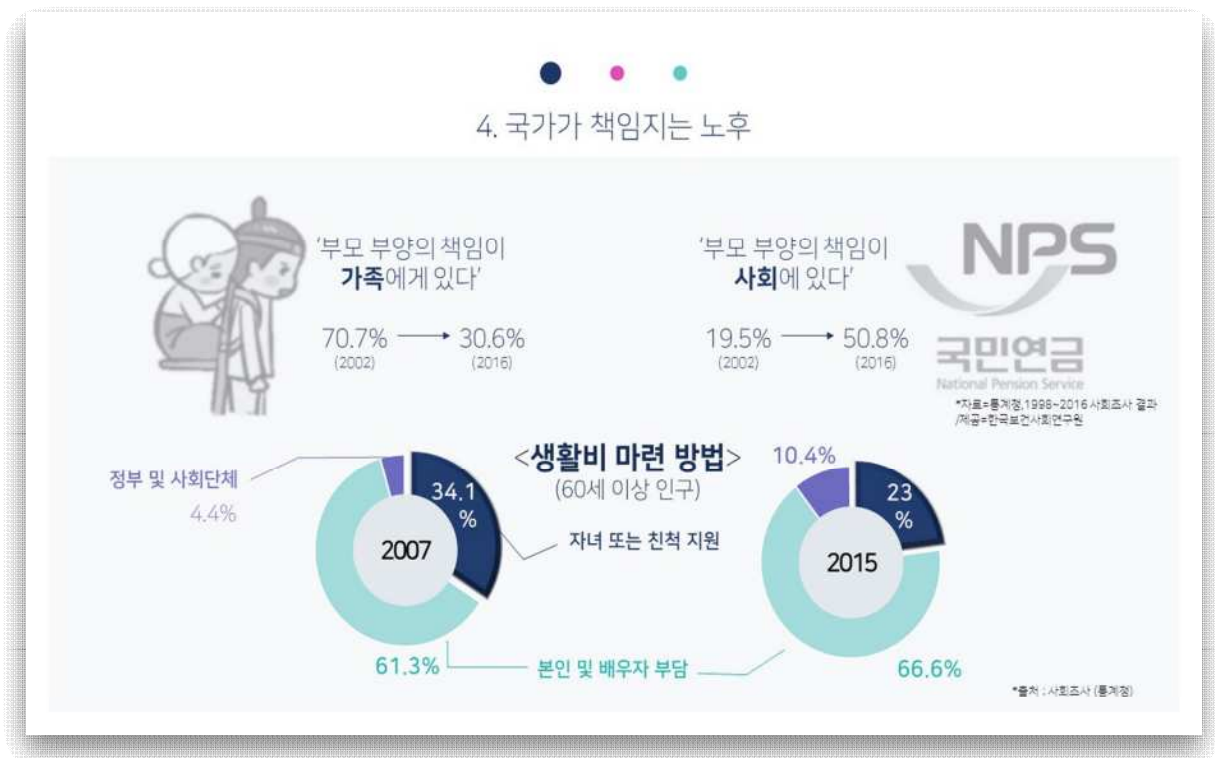
|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필요 생활비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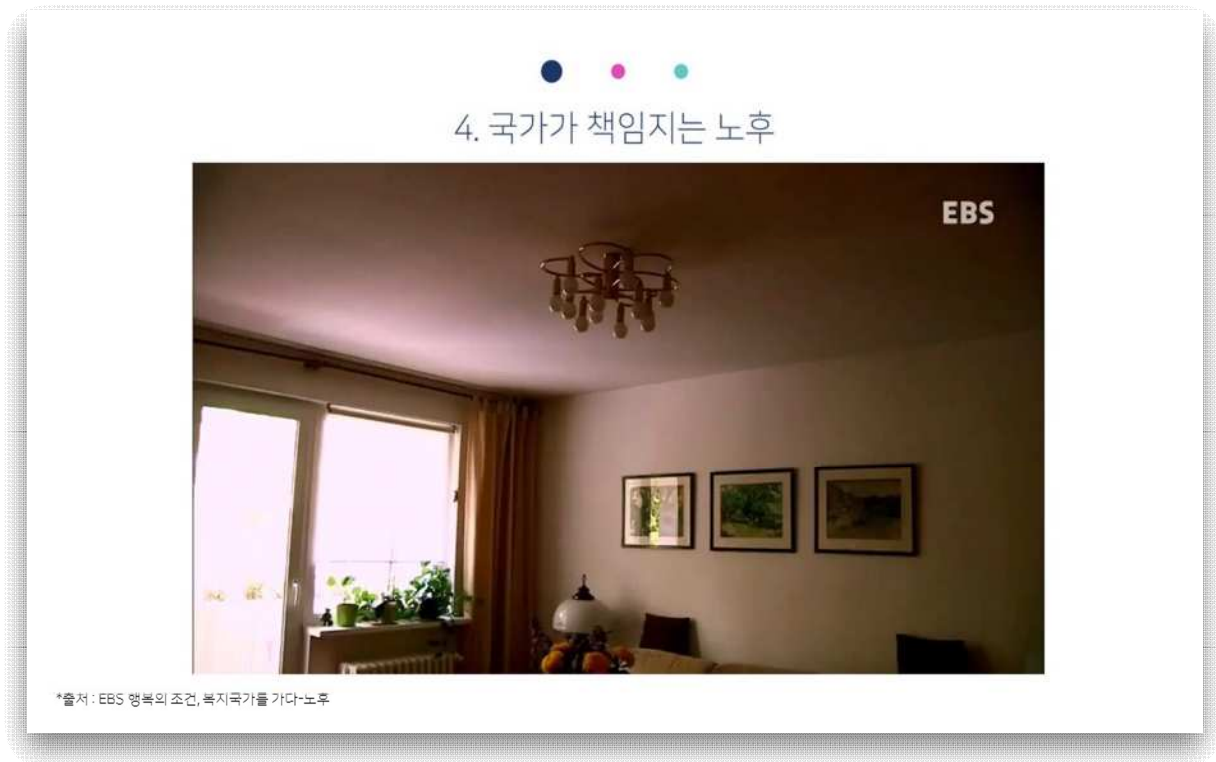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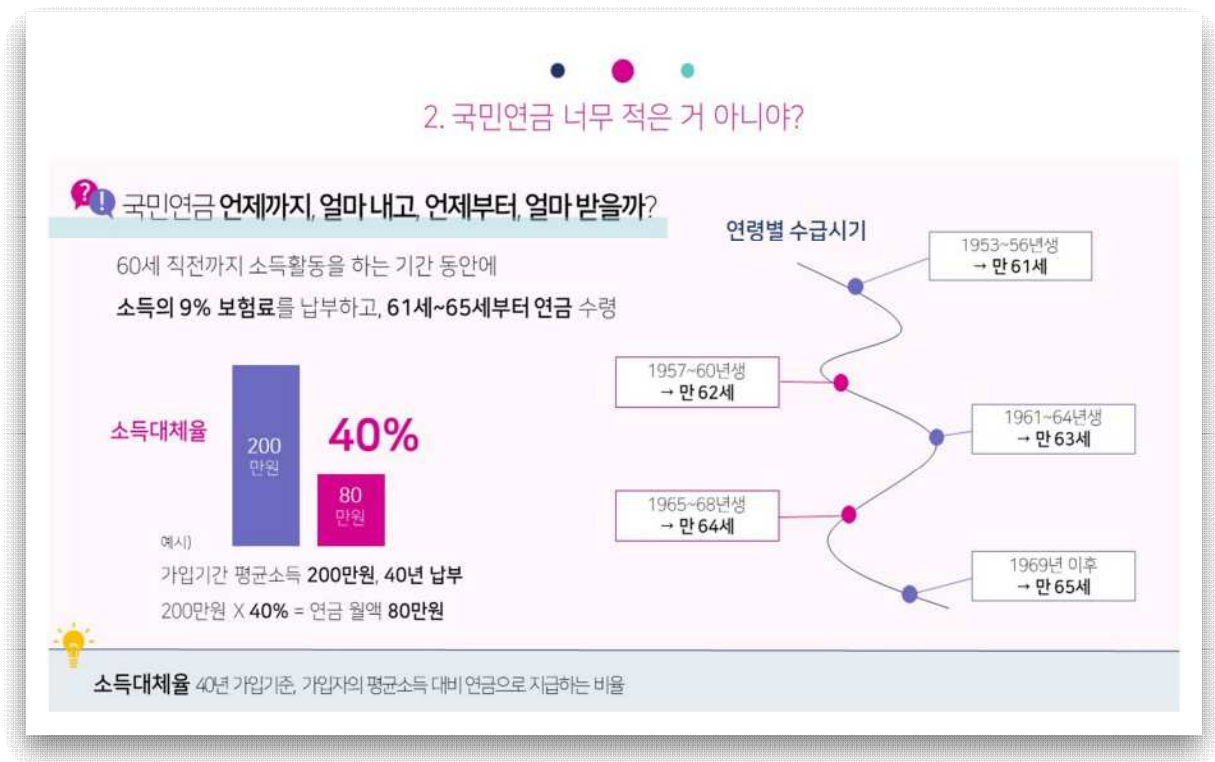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21]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3]

3.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요?

기본연금액 산정식

* A값: 수급직전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

1.2(A+B)X(1+0.05)ⁿ(12)

문제는 가입기간!

200만원	연금액 = 1.2(200만원+200만원) X(1+0.05X240/12) =	960만원	80만원	40%
400만원	연금액 = 1.2(200만원+400만원) X(1+0.05X240/12) =	1,440만원	120만원	30%

[슬라이드24]

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 연금별 수익비교

월 198만원(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소득자가 2015년부터 30년 가입하고 20년 수급 가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9%	8.3%	9%
	월 금액	18만원	16만원	18만원
급여율	급여율	31.6%	12.5%	14.55%
	월 금액	63만원	25만원	29만원
수익비		1.9	1.01	1.08

*출처: 오건호(201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슬라이드 25]

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슬라이드 26]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문형표 "연금고갈 빛 후대로 넘기면 '세대간 도적질'"



[슬라이드 27]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연도	부과방식비용률	연도	부과방식비용률
2013	3.7%	2050	17.4%
2015	4.0%	2055	19.4%
2020	5.2%	2060	21.4%
2025	6.5%	2065	22.5%
2030	8.0%	2070	22.6%
2035	10.0%	2075	22.5%
2040	12.8%	2080	22.6%
2045	15.5%	2083	22.9%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2013)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해야 할 경우 필요 보험료율 21%~23%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세대간 형평성 논란



부과방식 비용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슬라이드 28]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 공적연금이 성숙하고, 사회적 부양이 정착될수록 보험료 상승



| 사적 부양 책임의 감소

은퇴연령집단 이전소득 비교



[슬라이드 29]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 소득성장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 완화

예시) 100만원 소득자 보험료 9%와 400만원 소득자 보험료 13% 비교

국민연금 A값

- ✓ 수익비 관점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강조는 편협된 관점
- ✓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이전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 기대여명 증가

	1970년	2015년
60세	15.9세	24.6세
65세	12.9세	20.3세

| 사회발전의 혜택

1950년대와 현재 사회를 비교하면
교육, 주거, 인프라 등 사회발전의 혜택을 누림

[슬라이드 30]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출처: JTBC [팩트체크] '지금 보장 안 된다?'...국민연금 위기설 확산, 왜

[슬라이드 31]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2013) (단위: % 실액환)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GDP
		총수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31.1	3.9	2.4	1.5	1.1	1	2.8	1,344,421
2015	33.6	4.5	2.4	2.1	1.2	1.2	3.3	1,531,088
2020	39.3	5.1	2.5	2.6	1.6	1.6	3.5	2,155,210
2025	44.1	5.1	2.6	2.5	2.0	1.9	3.1	2,859,011
2030	47.8	5.2	2.6	2.5	2.5	2.5	2.7	3,624,205
2035	49.4	5.1	2.6	2.4	3.1	3.1	2.0	4,422,196
2040	47.4	4.9	2.7	2.2	4.1	4.1	0.8	5,257,143
2045	41.1	4.7	2.7	1.9	5.0	4.9	-0.3	6,182,966
2050	30.5	4.3	2.8	1.5	5.7	5.7	-1.4	7,315,306
2055	16.0	3.6	2.8	0.8	6.1	6.1	-2.5	8,455,306
2060	-2.9	2.7	2.7		6.9	6.8	-4.1	9,583,907
2065		2.8	2.8		7.4	7.4	-4.6	10,883,472
2070		2.9	2.9		7.7	7.7	-4.8	12,326,434
2075		2.9	2.9		7.7	7.7	-4.8	14,061,039
2080		3.0	3.0		7.8	7.8	-4.9	16,135,257
2083		3.0	3.0		7.9	7.9	-5.0	17,512,741

2060년 기금소진 이후 GDP의 4~5% 부족

[슬라이드 32]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및 노인인구 추계



-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7.4%,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의 6.3%
- 현재 OECD는 8.9% 지출, 유럽국가들의 경우 GDP의 평균 11% 이상 지출, 국가가 망하거나 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없음
- 오히려 노인인구 대비 공적연금 GDP 지출이 적다는 것은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슬라이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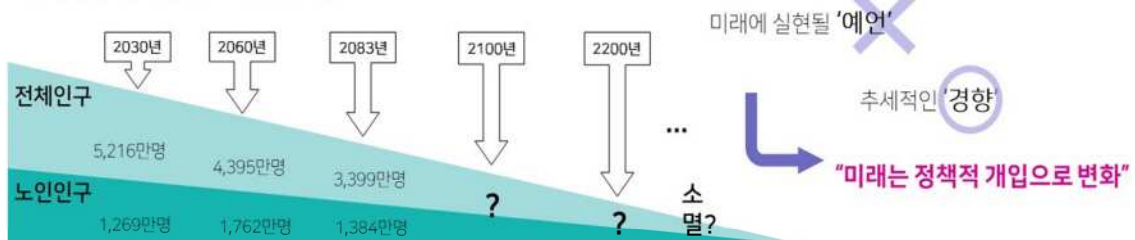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 기금고갈은 국민연금의 파산일까?

NO! 기금 소진 시점 연기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

점진적인 보험료 상승, 재정지원, 인구구조 및 고용 안정 등
다차원적인 정책시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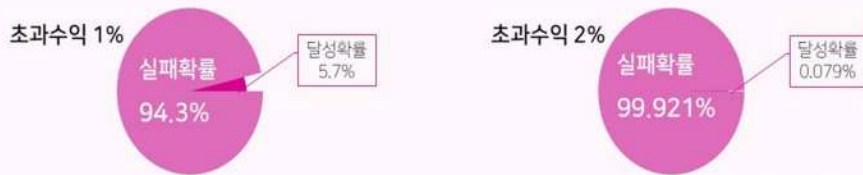
| 재정추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슬라이드 34]

7.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소진을 막는다?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향후 40년 기준)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10년간	30년간
시장평균 +1%p	11.0%	1.0%	0.4%
시장평균 +2%p	5.1%	0.1%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유추일련도 데이터 조사

[슬라이드 35]

7.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소진을 막는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익률 평균
국민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5.3	4.6	6.2
	일본 GP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2.3	-3.8	1.9
	캐나다 CPP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18.7	3.7	5.9
	스웨덴 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13.7	6.8	5.2
직역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2.4	0.6	4.9
	네덜란드 AE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14.5	2.7	5.7
국부펀드	노르웨이 GPF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7.6	2.7	5.0

*자료 : 각 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ABP 수익률의 경우 2005~2014년 연차 보고서, 2000년~2004년 홈페이지 참고)

[슬라이드 36]

PART 3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슬라이드 37]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중위소득 (2017년 1인 가구)	1,652,931원
노후 적정생활비 (2017년 개인기준)	1,453,000원
노후 최소생활비 (2017년 개인기준)	1,040,000원
최저생계비 (2017년 1인 가구)	661,172원



45 만원



평균소득월액 218만 원
가입기간 20년
직장가입자 기준(2016년 말)

[슬라이드 38]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노인소득의 상대 비율과 소득 구성: OECD 평균과 한국의 비교



- ✓ OECD의 경우 근로집단 소득 대비 약 83%가 은퇴집단 소득이며, 은퇴집단 소득 중 연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2%, 공적 이전(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임
-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20만원을 근로집단 가처분 소득으로 본다면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약 124만원 수준이 되어야 하며, 공적연금이 노후 최소생활비(104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슬라이드 39]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소득대체율의 추락 = 우리 노후생활의 추락

소득대체율
최소 50% 수준으로!

[슬라이드 40]

2. 사각지대 해소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모두의 노후가 보장될까요?



[슬라이드 41]



[슬라이드 42]



[슬라이드 43]

2.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사업장가입자 전환 -

| 특수고용노동자 약 230만 명 추정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업장가입자 전환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으로 **노후 준비 취약**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 부담**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중략)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2017.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슬라이드 44]

2.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보험료 지원 -

53.5%

⋮

납부예외자

전체 지역가입자 813만 명 중
435만 명이 납부예외자

39.4%

⋮

체납자

전체 지역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163만 명이 체납자

88.7%

⋮

기준소득월액 미만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203만원 미만이 88.7%
(cf. 직장 가입자: 45.6%)

💡 ※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고 있음

- 농어업 지역가입자의 체납률 12.6%

- 도시지역 체납률 42.7%

- ✓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및 체납 비율 높음
- ✓ 소득수준 역시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슬라이드 45]

3. 국민연금 신뢰회복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남인순 의원 발의안)

[슬라이드 46]

4. 기금운용 불신 해소



RECKITT BENCKISER
3조 1142억원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2356억원 손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합리한 합병



6조 3735억원
국내 술·담배·도박 기업(2013~2016년)



Hanwha
한화, 풍산 등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MITSUBISHI
4조 707억원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시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금리(최대 48%) 대출
해당구간 통행료 1km당 132원 수준(타구간의 1.3배)

"국민의 노후자금,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47]

4.기금운용 불신 해소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회의 공개



Investment Committee Part 1 | September 18, 2017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금운용 체계 확립”

- | 가입자의 대표성 ·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
→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독립**
- | 기금운용 관련 회의록, 자산 · 투자 ·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

[슬라이드 48]

4.기금운용 불신 해소

| 해외 공적연금 사회책임투자 사례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노르웨이 정부연금
한화, 풍산 등 확산탄 생산업체 투자 제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기금
삼성 백혈병 문제 해명 요구 및 자체 조사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뉴욕시 연기금
맥도날드 최저임금 인상요구

“좋은 투자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투자.”

사회책임투자 강화, 생색내기를 넘어 기금 투자의 실질적 원칙으로!

[슬라이드 49]



[슬라이드 50]



[슬라이드 51]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

→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제성장 둔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 사각지대 축소

더 많은 기여를

경제 성장을·임금상승률·기금수익률 제고

더 길게 내고

청년·노년 일자리 안정

더 많은 급여를

급여적질성 확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슬라이드 52]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2018년, 국민연금의 방향을 결정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이 진행됩니다.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이루어 내고,

민주적인 기금운용과

책임성 있는 투자인식을 만들어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슬라이드 53]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 **국민연금 개혁**으로 시작합니다.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Public Pension for All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교안 해설)”

<강사소개>

노후.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늙고 죽습니다. 노후는 미래의 내 문제이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원 전 1,000년경에는 인간이 평균 25년 정도 삶을 누렸다고 하고, 불과 1950년대에도 평균 수명은 48세였다고 합니다.(물론 신생아 사망률이 높긴 했지만...)

<참고> 80세 이상 노인인구 수 및 비율(60년대에 비해 약 10배 정도 증가)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전체	24,989,241	31,435,252	37,406,815	43,390,374	45,985,289	47,990,761
80세 이상	92,609	113,803	171,449	289,638	476,965	962,118
비율	0.37%	0.46%	0.69%	1.16%	1.91%	3.85%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류가 이룬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가 수명연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표를 보시죠(슬라이드 4).

PART 1 -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4]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 약 725만명이 넘어섰습니다. UN에서 노인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들어보셨죠? 출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많아지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인구형태가 두터운 항아리 모양에서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버섯구름과 비슷한 모양으로 변해갈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마치 핵폭탄 폭발의 충격과 맞먹는 게 아닐까요?

[슬라이드 5]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체 인구에서 14세 미만 아동은 2005년 19.1%였는데, 불과 10년 뒤인 2015년엔 13.8%로 대폭 줄어들었고 2065년엔 9.6%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975년 38.6%였던 것에 비한다면 거의 1/4 수준으로 낮아지는 엄청난 변화죠. 노인은 3.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 그리고 2065년엔 42.5%까지 늘어납니다. 기대수명이 1975년엔 남자 60.3세, 여성 68.2세였는데, 2065년엔 남성 88.4세, 여성 91.6세로 정말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저출산, 그리고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인 것이죠.

[슬라이드6]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을 노인부양비라고 합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어떤가요.

[슬라이드7] - <영상-길 위에 내몰린 노년>

[슬라이드8]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노인 빈곤율은 45.7%입니다. 그나마 기초연금이 도입돼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상태에 빠져 있죠.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일 뿐 아니라, 평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9]

그러다보니, 노인 자살률도 압도적 1위입니다. OECD평균보다 3배나 높죠.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살하는 이유도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가장 많습니다. 건강이나 외로움, 가족,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높은 노인빈곤 문제가 결국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헬조선인 셈이죠.

[슬라이드 10]

노인 빈곤은 곧 소득문제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가 부부기준으로 최소 193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60만원 정도 돼야 그래도 적정하다고 합니다. 노인 개인은 최소 114만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최소 183만원이 필요하고, 264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018년 1인 가구 기준 약 167만원이니까, 상대적 빈곤선 50%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83만 6천원, 60%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0만원이 돼야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생계급여는 5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잘 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슬라이드 11]

여러분들은 따로 노후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노후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이걸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53.3%로 가장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가운데 213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 서민에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인 셈입니다.

[슬라이드 12]

예전에는 대부분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 왔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가 크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모셔서 그나마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 한 두 명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고, 부모님도 오래 사시는데, 자녀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고,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점점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자녀나 친척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2007년 34.1% → 2015년 23%).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보니, 노후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세대의 문제이고, 자녀세대 역시 노후준비가 고민이니, 결국 모든 세대의

문제인 셈입니다. 결국 노후는 모든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13]

그런데 우리 사회가 노후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노인빈곤율은 낮아집니다. 공적연금 소득을 제외할 경우 빈곤율은 OECD가 더 높습니다. OECD 노인들은 공적연금 외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러나 충분한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에 빈곤율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만큼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산이나 근로 등 다른 소득보다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고 노후를 생활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 낮죠.

그런데 한국은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소득불평등도 심하죠. 영상으로 본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4]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입니다. 실제 정규노동시장에서의 퇴출되는 연령은 53세 정도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소득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받아도 먹고 살 정도가 되지 않다보니,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평균 71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능력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존 자신이 해오던 일과 상관없는 열악한 일자리죠.

그런데 평균 수명은 84세 정도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텐데요. 이땐 몸이 힘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통계로만 보더라도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즉, 한국의 노인은 먹고 살기 위해 늙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이조차 불가능하겠죠. 기대수명까지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15] - 독일 영상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결국 공적연금이 중요합니다.

PART 2 -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슬라이드 16]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7]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공공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공공부조(자산조사를 한다는 점에서)와 공적연금(70% 보편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중간 성격의 기초연금,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이 각자 알아서 상품으로 구매하는 개인연금이 있죠.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연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직역연금도 국가가 관리한다는 면에서 공적연금이고,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어 퇴직연금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18]

실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들 보면, 대부분의 댓글반응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내 돈 내놔라. 등등. 혹시 이런 댓글 남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하거나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슬라이드 19]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소득활동을 할 때 매월 소득의 9%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매달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고,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수급연령은 처음에는 60세였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연금이 본인 평균소득의 몇 %를 지급해주는지 알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2018년 45%이고 점차 낮아져 2028년에 40%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

다는 뜻입니다. 1년 가입마다 평균소득의 1%씩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슬라이드 20]

근데 국민연금 정말 적게 받는 걸까요?

아까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9% 즉 18만원입니다. 40년을 가입했다고 하면, 총 납부액은 8,640만원이 되는데,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5세까지 산다면 매달 80만원씩 20년(240개월) 동안 총 수령액은 1억 9,2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평균적으로 산다면 낸 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받습니다. 또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약 2,100만(임의/임계 제외), 소득신고자 약 1,700만(장기체납자 약 100만), 납부예외자 약 400만)인데, 노동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4.5%(9만원)을 냅니다. 직접 본인이 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거죠.

[슬라이드 21]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받고, 물가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연금액도 매년 자동 인상돼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례 언급) 개인연금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들어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돼서 받는 노령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얻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고, 본인이 가입중이나 수급 중에 사망해도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22]

2017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 38만원(가입기간이 짧았던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498천원), 장애연금은 44만원, 유족연금은 27만원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얼마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은 40년인데 그 기간 온전히 일을 해서 보험료는 내는 사람들은 드물죠. 앞으로도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21~22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도 낮기 때문이죠. 소득대체율 40%는 외국에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문제죠.

결론은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많이 받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다보니 실제 연금 수령액은 앞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23]

우리나라 저소득층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지 계산해주는 기본연금액 산정식입니다.

A값은 본인 수급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을 말합니다.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입니다.

n: 20년을 초과 가입 개월수입니다.

국민연금은 2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이 식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금액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한 1년마다 5%씩 증가합니다. 예컨대 수급직전 가입자 평균소득이 200만원,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2 \times (200\text{만원} + 200\text{만원}) = 480\text{만원}$ 이 기본연금액이 됩니다. 1년마다 5%, 24만원씩 늘어서 전체 40년이 되면 960만원, 월 80만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본인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계산하면 720만원, 월 60만원이 됩니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되는 거죠. 연금액의 절반을 100만원 보다 더 높은 가입자 평균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440만원, 월 120만원이구요. 소득대체율은 30%가 됩니다. 즉 100만원, 400만원 소득자는 보험료를 낼 때는 그 소득의 9%를 내지만,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평균 각 150만원, 300만원 소득자로 계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하후상박, 즉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가입기간입니다. 그림 설명. 실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을 잘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거나 받더라도 급여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후에는 그 누구보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잘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한 거죠.

[슬라이드 24]

앞서 노후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 가운데,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9배이고, 퇴직연금은 1.01배, 개인연금은 1.08배입니다. 국민연금이 낸 것에 비해 실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죠. 특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경우 수수료를 감안하면 더 낮아집니다.

[슬라이드 25]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써 제 역할을 할지도 회의적입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9.6%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는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역시 7.1%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죠. 일찍 회사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하거나, 애들 학비 대고, 결혼 보내야 하는 거죠.

개인연금 역시 노후를 위해 별도로 들었다가도, 중도에 해지해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액도 생각보다 작을 겁니다.

[슬라이드 26]

국민연금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문형표씨는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슬라이드 27]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기대수명이 증가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져서,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엔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보험료를 21%~23% 정도 내야 하는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는 9% 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미래 세대는 훨씬 더 많이 내야니까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언뜻 보면, 그럴 듯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제도 성격과 취지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2060년에 노인이 되는 현재의 청년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못된 세대라는 식입니다.

[슬라이드 28]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후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 등의 주장은 마치 국민연금 자체가 많은 제도적인 결함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이를 부양해야 할 부담 자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노인부양 문제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인 셈이죠. 현 세대는 현재 노인세대와는 다르게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니, 오히려 후

세대 부담을 줄이는 셈입니다.

예컨대 현재 노인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돼서 그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앞서 봤듯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기도 어려우니 많은 노인들이 노인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활동 세대가 조세를 통해 기초연금 방식으로 사회적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도 늘어나는 노인부양의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도가 성숙하고 사회적 부양이 정착될수록 보험료 상승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긴 할 건데요. 다만 2059년까지 현재처럼 9%였다가 2060년에 바로 21%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조금씩 오르긴 할 건데요. 그러면 기금소진 시점도 좀 더 뒤로 연기될 거구요. 문제는 그 사이 인구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2060년에 전체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하고, 일하는 사람 한 명당 거의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구요. 그러나 그 사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보험료 상승은 상당히 억제될 수 있습니다. 21%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에 가깝습니다.

미래세대는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사전이전 즉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부담은 줄어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 비해 아직 사적부양 책임이 높은 편인데요.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그 부담이 감소하는 거죠. (다만 설명할 때 유의할 점은 이전소득 비중이 OECD 국가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슬라이드 39 참조)

더 중요한 것은 노후 부담이 없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 고용이 안정되고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참고)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결과 비교

- (1) 단순시나리오 1 : 기본 가정 유지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2) 단순시나리오 2-1: 보험료율 인상1(11%)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3) 단순시나리오 2-2: 보험료율 인상2(13%)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4) 단순시나리오 3: 출산율 상승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5) 복합시나리오 1-1: 출산율 상승+보험료율 인상1(11%)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6) 복합시나리오 1-2: 출산율 상승+보험료율 인상2(13%)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 (7) 복합시나리오 2: 출산율 상승+보험료율 인상+ 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기금수익률 상승과 소득대체율 변화(현행, 45%, 50%)

구분	시나리오	소득대체율	보험료수입-급 여지출 역전	수지적자	기금소진
단순 시나리오 1	기존 가정	현행(->40%)	2032년	2044년	2059년
		45%	2032년	2043년	2058년
		50%	2032년	2042년	2056년
단순시나리오 2-1	보험료율 인상 1	현행(->40%)	2036년	2038년	2064년
		45%	2035년	2047년	2062년
		50%	2034년	2047년	2060년
단순시나리오 2-2	보험료율 인상 2	현행(->40%)	2037년	2054년	2070년
		45%	2034년	2051년	2067년
		50%	2034년	2049년	2064년
단순시나리오 3	출산율 상승	현행(->40%)	2032년	2044년	2060년
		45%	2032년	2043년	2058년
		50%	2032년	2043년	2056년
복합시나리오 1-1	보험료율 인상 1 + 출산율 상승	현행(->40%)	2036년	2049년	2066년
		45%	2035년	2047년	2063년
		50%	2034년	2046년	2061년
복합시나리오 1-2	보험료율 인상 2 + 출산율 상승	현행(->40%)	2037년	2056년	2077년
		45%	2037년	2052년	2070년
		50%	2037년	2050년	2065년
복합시나리오 2	보험료율 인상 2 + 출산율 상승 + 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 ·기금수익률 상승	현행(->40%)	2041년	2064년	2088년까지 미발생
		45%	2038년	2058년	2077년
		50%	2037년	2054년	2070년

[슬라이드 29]

통상 미래는 현재에 비해 다 나은 경제와 소득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1988년에 비해 약 5.8배 늘어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약 5.9배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늘면 보험료율이 좀 더 올라도 가처분 소득에 더 여유가 있죠.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자가 9%, 400만원 소득자가 13% 보험료율이라면 낸 후에 가처분 소득은 각 91만원과 348만원 됩니다. 400만원 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100만원 소득자보다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죠. 앞으로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와 소득성장에 따른 누진세율을 매기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이 높은 것은 그래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는 현재보다 수명이 늘 거고, 연금도 평균적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기대여명 표를 보면 1970년에는 65세까지 생존한다면 향후 13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5년에는 2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수명에 한계가 있겠지만 미래에는 평균적으로 연금을 더 오래 받을 거라는 점에서 보험료율이 좀 더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 세대는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발전을 이뤘던 현재의 노인세대가 이뤄놓은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후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교육, 주거, 인프라 등 사회발전의 토대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니 동의안할 수 있겠네요. 전쟁이 나거나, 핵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구요. 그래도 미래 사회 인프라가 현재 사회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이죠.

결론은 미래세대가 보험료율이 좀 더 높을 거라는 수익비 관점에서만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편협된 관점이고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의 결론은 국민연금을 축소 하자는 건데,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아마 재정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 개인연금 사업자 등)

국민연금에 대한 또 다른 오해와 왜곡, 또 볼까요?

[슬라이드 30] - JTBC 영상

[슬라이드 31]

국민연금이 고갈난다는 주장 때문에 실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됐을 때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면서 재정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표는 지난 2013년 재정추계 결과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 수지차가 2045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060년엔 쌓아두었던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2060년 기금 소진 이후 GDP의 약 4~5%가 부족하게 됩니다.

과연 감당 가능할까요?

[슬라이드 32]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5년 기준 GDP대비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지출은 우리나라는 2%, OECD 평균 8.4%, 유럽 선진국은 10%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6.3%, OECD 평균 9.5%, 유럽 선진국은 11.4%입니다. 지출이 GDP의 10%가 넘어도 국가가 망하거나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죠.

참고로, 2050년에 우리나라는 OECD 중 세 번째로 노인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일본 38.8%, 스페인 37.7%)됩니다. 그럼에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죠. 오히려 현재의 노인빈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 33]

기금소진이 국민연금 파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금이 쌓이는 것은 받아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의 표를 보면 2020년에도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GDP의 2%도 안 됩니다. 대신 보험료와 기금수익 수입이 5%가 넘죠. 그러나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만약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고 그 해 급여를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렇게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재정추계대로라면 기금이 소진된 2060년 이후에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GDP의 4~5%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를 보면 2060년 급여 지출이 GDP의 약 7%인데 비해 보험료 수입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자가 급격히 줄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가입자 수와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들(출산률, 고용률, 소득상승률 등 개선)이 동반되면 상당부분 재정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좀 부족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죠. 현재 독일의 경우 급여지출의 1/4을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2060년 노인 인구가 40%에 육박하는데 GDP 7%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만약 재정추계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결국 소멸한다는 비정상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재정추계는 미래에 실현될 예언이 아니라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줄지 않도록, 노인인구가 40%가 되지 않도록, GDP가 더 커지도록, 또 소득도 높여 보험료를 상승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죠.

[슬라이드 34]

오해가 좀 풀리셨는지요. 국민연금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은 기금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기금소진

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 수익률 1%를 올리면 보험료를 2% 올리는 것과 동일하고, 기금소진 시기를 8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데요. 보험료 안올리고 기금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이 안정되면 좋죠.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 향후 40년간 수익률을 1% 초과 달성할 확률은 5.7%이구요. 2%는 0.079%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초과수익 달성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죠. 수익률 연간표준편차(변동성)를 4%로 했을 때입니다.

실증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를 한 건데요. 시장평균보다 1% 초과수익을 낼 확률은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2%는 제로구요. 달성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변동성을 매우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대신 망할 확률이 더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슬라이드 35]

이 표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 다른 세계 주요연기금의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이 가장 우수하죠.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곤두박질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연기금 수익률은 -2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그랬다면 100조 정도 손실을 입었다는 셈인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도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변동성(위험)이 적으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종종 특정기간만 비교해서 국민연금이 잘못 운영되어 수익률이 낮다고 오도하고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전문가에 맡겨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PART 3 -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과제 또한 적지 않은데요.

[슬라이드 37]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소득 20년 가입기준 국민연금액은 45만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약 100만원 정

도 인데, 품위 있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슬라이드 38]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OECD의 경우 근로집단 대비 은퇴집단 소득이 약 83%, 은퇴집단 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8%입니다. 우리는 은퇴집단 소득도 낮고, 연금의 비중도 매우 낮죠.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20만원 기준으로 보면 공적연금이 124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집단 소비성향이 전체 평균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낮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연금이 최소 104만원($220\text{만원} \times 70\% \times 6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후 최소 생활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국민연금은 최소 평균 74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국민연금 평균소득으로 20년 가입하면 45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좀 더 올려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A값 220만원 기준, 국민연금이 74만원 이상 되려면?

- 실질 소득대체율이 33% 이상 돼야 함. 소득대체율 40%일 경우는 33년, 45% 경우 30년, 50% 경우 27년 이상 가입해야함.

[슬라이드 39]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좀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1988년 제도 도입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나 98년 개혁 때 60%로 낮아지고, 2007년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08년 50%로 떨어지고, 이후 20년 동안 매년 0.5%씩 자동 삭감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45% 인데, 지금도 계속 연금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거죠.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노후생활도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첫 직장 진입 지연, 조기 퇴출, 임시·일용 일자리 증가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마저 계속 낮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넘

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애초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하고 다시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40]

앞서 이야기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이지만,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은 17~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보니, 연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가입기간이 평균 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30년이 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죠.

게다가,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521만 명이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 상태이고, 1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입률은 13.2%,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슬라이드 41]

물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크레딧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너무 짧고, 출산크레딧은 첫째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42]

크레딧 제도와 함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9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가입 기준을 10인 이상에서 최소 30인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기존 차등 지원 역시 사업장 이직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43]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특수고용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택배,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등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는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으로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노동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44]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면서 부담이 반으로 줄긴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납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53.5%가 납부예외자이고, 가입자의 39.4%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부분인 88.7%가 203만원 미만의 영세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농어업인의 경우 최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 덕분에 도시지역 지역가입자에 비해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이 12.6%로 3.5배 정도 낮습니다.

현재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를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춰줘야 합니다.

[슬라이드 45]

앞서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대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기 때문에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법에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조치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32조 국가의 책무 부부분에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46]

국민연금 불신의 큰 이유 중 하나가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 문제가 크기도 합니다. 지난 삼성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사실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이뿐 만 아니라,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살인기업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고, 술, 담배, 도박 등 불건전 사행성 기업뿐 아니라 일본전범기업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구요. 금융적 수익만을 중시한 기금운용 관행의 결과입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47]

국민연금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의 투자위원회 회의모습(2017년 9월 18일)을 동영상으로 상영하고 있는 것을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이렇게 변해야하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48]

수익률만 높으면, 이유 불문하고 투자하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몇 가지 들어본다면, 노르웨이 연기금은 확산탄 생산업체 투자 제외를 결정했고,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은 삼성 백혈병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해명요구 및 투자판단을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도 벌써 6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제대로 도입적용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49]

한국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 정도로 암울합니다. 여러 보시는 것처럼, 암울한 지표들이 가득합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아이 키우기 어렵고, 노인문제도 심각하죠. 국민연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고,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이유들입니다.

[슬라이드 50]

만약 국민연금기금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이나 공공병원 등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늘어날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부양이나 주거비용 부담은 오히려 낮출 수 있죠.

국민연금은 3년, 5년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수십 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유지하고 늘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슬라이드 5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불안의 문제가 아닐까요?

2060년 기금소진,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거죠. 보험료 낼 사람이 적고, 소득도 잘 오르지 않으니깐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헬조선’의 우리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 일입니다. 보험료 낼 사람들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도 높이고, 더 오래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국민 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거구요.

[슬라이드 52]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과 노후존엄 보장을 위해 적절한 급여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역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금운용을 통해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7년 활동보고서

집행위원장 정용건

주소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01호

전화 070-4211-6578

팩스 02-423-6578

이메일 pension1045@gmail.com

홈페이지 www.pensionforall.kr
